



주간통일정세 2010-02(2010.01.04~01.10)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0-02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北김정일, 새해 첫 공개활동 희천발전소 시찰(1/4, 조선중앙통신)**
 - 2010년 1월 4일 김정일 위원장이 “희천1호 발전소 용립 언제(댐) 건설장과 희천2호발전소 언제건설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전함.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의 창조자들인 군인 건설자들을 비롯한 발전소 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종전 같으면 10년 이상 걸려야 할 방대한 대규모 발전소 건설을 불과 몇 해 사이에 끝낼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렸다”며 희천발전소 건설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전함.
 - 김 위원장은 또 “2012년 전으로 발전소건설을 끝내기 위해서는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어 일대 진공전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함.
 - 이날 시찰에는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경희 경공업부장, 장성택 행정부장, 박남기 계획재정부장을 비롯한 당 중앙위원회 책임간부들, 그리고 북한군 대장 현철해 등이 수행함.

- **北, 새해 벽두 ‘새별’ 강조 (1/4,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이 1월 2일 ‘백두산천지종합탐험대 관측’을 인용, “새날의 여명이 밝아오기 전까지 백두산의 하늘가에서는 온 밤 환한 보름달이 떠 시정이 기상학적으로 제일 밝은 10등급을 기록했고, 해 뜰 무렵에는 ‘새별’로 불리는 금성이 천지상공에서 유난히 밝은 빛을 뿌렸다”고 밝힘.
 - 김정일은 2009년 1월 후계자 내정 이후 그에 대한 첫 찬양가요 ‘발걸음’ 등에서 ‘김 대장’으로 지칭됐지만 생모 고영희가 살아 있던 2004년까지는 ‘새별 장군’으로 불렸고, 일부에서는 아직도 이 호칭을 쓰는 것으로 전해짐.

- **김정일, 정초부터 산업현장 잇따라 시찰(1/4, 조선중앙통신)**
 - 1월 4일 새벽 김 위원장이 새해 첫 공개 활동으로 북부 자강도의 희천발전소 건설현장을 시찰했다고 보도한 데 이어 4일 오후 6시께는 평양 이남의 황해남도 재령광산을 현지지도했다고 전함.
 - 희천 발전소 시찰에는 노동당의 김기남 비서, 김경희 경공업부장, 장성택 행정부장, 박남기 계획재정부장과 북한군의 현철해 대장 등이 수행했음.
 - 김 위원장이 재령광산 현지지도에서 광산의 노동계급이 1년도 안 되



는 짧은 기간 현대적인 광산으로 전변시킨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으며, “철광석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해 모든 채굴 및 운반설비들에 대한 설비관리를 잘하고 정비보수를 정상화하여 그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정은 위원장의 재령광산 시찰에는 김기남 비서와 김경희, 장성택 부장이 수행
- **北, 김정은 생일 ‘국가기념일 지정설’(1/5, NK지식연대; 1/8, 데일리NK)**
 -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된 셋째 아들 김정은의 생일(1월8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
 - ‘NK지식인연대’는 1월 5일 ‘현지 통신원’을 인용한 자체 홈페이지 글에서 “지난 2일 초급 당비서 이상 당일꾼 협의회가 모든 단위에서 진행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김정은 동지의 탄생일을 뜻 깊게 기념할데 대하여’라는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지시문이 하달됐다”고 밝힘.
 - 이 단체는 또 “지시문은 1월8일을 ‘영원한 우리 미래’ 김정은의 탄생일로 공식화하고, 김정은에 대해 ‘백두의 혈통을 완전무결하게 이어 받은 또 한분의 지도자’라고 강조했다”면서 “김정은의 위대성과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 탁월한 영도력에 대한 학습과 강연을 조직하고, 김정은의 생일에 ‘발걸음’(김정은 찬양 가요) 합창을 시작으로 ‘충성의 노래모임’을 열도록 각급 당조직에 지시했다”고 전함.
 - 그러나 통일부 등에 따르면 개성공단의 북측 근로자들은 8일에도 평소와 똑같이 출근했고, 판문점의 북측 연락관들도 정상근무를 함.
 - 조선중앙TV를 비롯한 북한의 언론들은 이날 오후 5시 현재 김정은 생일의 민족최대명절 지정이나 충성다짐 행사에 관한 보도를 전혀 하지 않고 있음.
 - **김정일, 새해 들어 첫 군부대 시찰 (1/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근위 서울류경수제105탱크(탱크)사단’ 관하 구분대(대대급 이하 부대)를 시찰하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함.
 - ‘근위 서울류경수제105탱크사단’은 한국 전쟁 당시 서울에 처음 입성한 전차 부대로, 북한은 1960년 김일성 주석과 김 위원장이 이 사단을 방문한 8월25일을 ‘선군혁명 영도 개시일’로 정해 기념하고 있음.
 - 김 위원장은 이번 시찰에서 부대의 교양실, 침실, 식당, 부식물창고 등을 돌아본 뒤 탱크 훈련모습을 참관했으며 “부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중앙통신이 전언
 - 이번 군부대 시찰에는 북한군의 현철해 대장 등 지휘간부들이 수행



- **北탱크부대, 남한 공격 ‘가상훈련’.김정일 참관(1/5,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새해 첫 군부대 시찰로 ‘근위서울류경수제105 탱크(탱크)사단’을 찾아 남한 지역 공격 상황을 상정한 가상 훈련을 지켜본 것으로 나타남.
 - 조선중앙TV는 5일 김정일 위원장의 탱크사단 시찰 뉴스를 전하면서 모두 59장의 사진을 내보냈는데, 그 중 4장에 남한 지명과 고속도로 명칭, 구간 거리 등이 선명하게 쓰인 표지판 옆을 탱크가 달려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음. 구체적으로 한 사진에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부산 374km’와 ‘김해’, 다른 사진에는 ‘전라남도’와 ‘호남고속도로’, 또 다른 사진 2장에는 ‘부산’, ‘창원’, ‘삼량’이라는 글자가 뚜렷하게 보였음.

- **김정일, 레성강 발전소 건설현장 시찰(1/7,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마무리 단계인 레성강 청년2호발전소 건설현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전함.
 -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공사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둘러본 뒤 “레성강 청년2호 발전소는 우리의 후대들에게 물려줄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며, 먼 훗날에 가서도 손색 없게 건설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해야 한다”면서 “모든 전선에서 대진공전을 과감히 벌려 민족사에 일찍이 없었던 세기적인 위업을 이룩하자”고 말했다고 보도함.
 - 이번 현지지도에는 최룡해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김경희 당 경 공업부장, 장성택 당 행정부장 등이 수행

- **김정일 집무 건물에 위성안테나 11개(1/7, 교도통신)**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에 적어도 11개의 위성 안테나가 세워져 있다고 교도통신이 캐나다의 중국어 군사전문지 ‘칸와디펜스리뷰(漢和防務評論)’ 1월호를 인용, 1월 7일 보도
 - 칸와디펜스리뷰는 평양역 북쪽에 위치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85호 집무실이 있는 사각형 모양의 건물과 김 위원장의 의무실, 15호 관저, 노동당 중앙선전부, 기쁨조로 불리는 여성들의 가무가 공연되는 8호 연회장 등을 찍은 위성사진을 1월호에 게재함.

- **日식물학자 선물 베고니아..김정은 ‘우상화꽃’?(1/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이 8일 일본의 식물학자 가모 모도테루씨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진귀한 식물’을 선물했다고 전함.
 - 북한은 1988년 2월 김정일 위원장의 46회 생일 때 우상화 꽃인 ‘김정일화(花)’(베고니아과 다년생 식물)를 처음 공개했는데, 이 꽃을 선물한 당사자가 바로 가모씨로서 김정은 생일에 맞춰 같은 베고니아를 선물한 것을 놓고 앞으로 김정은을 상징하는 ‘우상화 꽃’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옴.



- 김일성 주석의 경우 1965년 4월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을 때 당시 수카르노 대통령로부터 식물학자 분트가 육종했다는 난(蘭)과 열대식물을 선물받아 '김일성화'로 정함.

● 北 김정은, 83년생 아닌 84년생(1/10,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거명되고 있는 김정은의 실제 생년월일이 지금까지 알려진 83년 1월 18일이 아닌 84년 1월 8일로 밝혀졌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0일 보도
- 북한 정권에 밝은 소식통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인 김정은의 실제 생년월일이 84년 1월 8일이며 따라서 올해 26세라고 증언
- 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역시 공식석상에 모습을 나타내면서 생년월일을 1941년 2월16일에서 1942년 2월16일로 변경했다는 설이 유력하다고 보도
- 이는 1912년생인 김일성 주석과 30년차가 난다는 것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베이징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김 주석이 70세였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40세가 되도록 생년월일을 1년 늦추면서 후계자로 부상했다는 것임.
- 따라서 김일성 탄생 100주년인 2012년에 북한이 32년만에 당 대회를 열어 '강성대국의 대개막'을 선언하면서 김정은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30세 등장'을 부각하기 위해 김정은의 생년월일을 다시 82년생으로 변경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고 전함.
- 조선중앙TV는 김정은의 생일인 1월 8일 '은하수' 관현악단의 여성 보컬 노래 '축배를 들자'를 방송했고, 로동신문도 '향도의 당을 위해!'라는 제목의 '정론' 말미에 "...조선의 무궁변영한 미래를 위해 축배, 축배를 들자"고 썼으나 김정은은 거명하지 않음.
- 한편 마이니치신문은 자사가 입수한 북한군 관련 내부분건에 '김정은 대장 동지', '신성(新星) 대장군', '20대 장군' 등으로 김정은을 묘사해 그를 후계자로 기정사실화하려는 작업이 부각됐다고 보도함.

나. 정치 관련

● 北 박기서 전 평양방어사령관 사망(1/6, 조선중앙방송)

- 북한군 차수인 박기서 전 평양방어사령관이 사망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6일 전함.
- 이 방송은 "김정일 동지께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인 조선인민군 차수 박기서 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해 5일 고인의 영전에 화환을 보냈다"고 밝힘.
- 1929년생으로 알려진 박기서 차수는 제820전차군단장을 거쳐 1996년부터 2005년까지 평양방어사령관을 맡았고, 1982년 제7기를 시작으로 2003년까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국회의원 격)을 지냈음.



- **北, 태국 대사에 안성남 임명(1/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1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하면 태국 주재 조선특명전권대사로 안성남이 임명됐다”고 밝혔으나 그의 약력 등은 언급하지 않았음.
 - 안성남은 1996년 북한의 4자회담 대표단에 포함됐고, 1998년에는 외무성 북미국장으로서 북한의 ‘큰물피해 대책위원회’ 대표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한 바 있음.

- **北노동신문 책임주필에 김기룡 임명(1/7,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의 사장격인 ‘책임주필’에 2000년 8월 이후 조선중앙통신사 사장을 맡아온 김기룡이 임명된 것으로 7일 확인
 - 류샤오밍(劉曉明) 북한주재 중국대사가 새해를 맞아 지난 5일 대사관에서 북한 ‘보도부문’ 인사들을 초청해 연회를 개최한 소식을 전하면서 “김기룡 노동신문사 책임주필, 리해룡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 강창림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보도부문 일꾼(간부)들이 초대됐다”고 보도
 - 노동신문사 기자출신인 그는 1989년 중앙통신사 사장에 임명됐다가 1996년 해임됐으나 2000년 8월 다시 중앙통신사 사장에 복귀했고 이번에 북한 제1의 선전매체인 노동신문 수장으로 자리를 옮김.
 - 2007년 2월 임명된 전임 김중협 노동신문 책임주필의 거취는 확인되지 않음.

- **北노동신문, 남북 당국간 대화 재차 촉구(1/8, 노동신문)**
 -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남한 당국에 대해 대화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
 - ‘북남관계 개선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신년공동사설에서 남북관계를 강조한 대목을 거론하며 “남조선 당국은 대결과 긴장을 격화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고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북남대화과 관계개선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힘.
 - “북남관계 개선의 길을 열어나가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이고 “북남 공동선언들을 부정하면서 대화와 협력을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남북대화의 전제로 6.15와 10.4선언의 이행을 꼽음.
 - 남측의 ‘선(先) 비핵화 진전’ 요구에 대해 “핵문제를 북남관계 발전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과 같은 행위는 본질상 북남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위기속에 몰아넣기 위한 것으로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

- **北신문 “미래위해 촉배”..김정은 생일 후계암시?(1/8, 연합뉴스)**
 - 북한 노동신문이 8일 ‘향도의 당을 위해!’라는 제목의 ‘정론’ 말미에 제안한 일종의 ‘건배사’: “위대한 태양의 모습, 백두영장의 모습으로



찬란할 조선의 무궁변영한 미래를 위해 축배, 축배를 들자”

- 북한 당국이 아직 김정은 후계를 공식화하지는 않고 있지만 대신 ‘대표 언론’격인 노동신문을 통해 김정은의 생일을 경축하면서 권력 세습의 당위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느낌을 줌.
- 노동신문 정론에는 비슷한 맥락의 문구가 여러 곳 눈에 띄, 예컨대 “축포의 대시위는 향도의 당을 따라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밝아오고..(중략)..알게 하는 민족사적인 대경사였다”는 대목은 작년 김일성 생일(4월15일)과 노동절(5월1일)에 평양 대동강 유역에서 펼쳐진 ‘야회축포(불꽃놀이)’ 행사를 찬양한 것인데, 이들 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주도한 당사자가 김정은으로 알려짐.
- 북한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기관지인 ‘청년전위’도 이날 2면과 3면에 걸쳐 ‘만경대의 혈통, 백두의 혈통을 꿋꿋이 이어가는 주체조선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등의 특집 기사를 내보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전함.

● 김정일 “쌀밥·고깃국 유훈 관찰하겠다”(1/9, 노동신문)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쌀밥에 고깃국, 비단옷에 기와집’으로 요약되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을 관찰하지 못했음을 시인하며 주민생활 개선에 ‘올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짐.
- 노동신문은 1월 9일 ‘새로운 승리로 부르는 전투적 기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 위원장이 작년 현지도도길에서 주민생활 개선에 대해 한 발언을 소개했다고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전함.
- 김 위원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사상적 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군사 면에서도 강국 지위에 올라섰지만 인민생활에는 걸린 것(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며 “수령님(김일성)은 인민들이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살게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유훈을 관찰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 위원장은 이어 “나는 최단기간 안에 인민생활 문제를 풀어 인민들을 남부럽지 않게 잘 살도록 수령님의 유훈을 반드시 관찰하고자 한다”라고 강조
-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작년 정초부터 원산과 대안, 흥남 등 경제부문을 찾은 것도 주민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
- 신문은 또 “지금 우리 당은 인민생활의 결정적 전환을 안아오기 위한 웅대한 구상과 작전을 펼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김 위원장의 결심이라고 주장

● 北노동신문 “올해 남북관계 우려”(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9일 통일부의 작년 대북정책 평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시하면서 그 연장선에서 올해 남북관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냄.
- 이날 ‘시대는 겨레를 과감한 통일진군으로 부른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얼마 전 통일부 당국자들 속에서 지난해를 ‘남북관계에서 원칙



을 지킨 한해라는 등의 평가가 나왔다”며 이것은 “남조선 당국이 올 해에도 북남관계 개선을 달가워하지 않으면서 대결로 줄달음칠 것이라는 우려를 품게 하고 있다”고 말함.

-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 개선의 기회는 응당 결실을 봐야 한다”며 남한 당국에 6.15공동선언의 이행과 “비핵·개방·3000 같은 반통일 대결정책을 전면 파기해야 한다”고 요구
- 노동신문은 이날 ‘민족적 화해와 협력은 통일의 선결 과제’라는 제목의 논설에서도 남북 간 화해·협력을 역설하면서 “북남관계 개선을 진실로 바라는 사람이라면 협애한 대결관념을 버리고 개별적인 주의 주장이나 당리당략의 좁은 울타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
- 신문은 그러나 이 같은 입장 천명이 “우리의 선의와 아량에 동족대결책동으로 대답하는 (남측의) 망동까지 묵인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판”이라며 “북남관계 개선을 바라지만 우리 체제까지 헐뜯으며 대결 소동을 일으키는 호전광들에게는 절대 관용과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 민주조선 “체제 비판에 관용 없다” 주장(1/9, 민주조선)

- ‘동족대결의 종착점은 파멸이다’라는 제목의 개인 논평에서 “공동사설에서 천명했듯 6.15선언과 10.4선언에 기초해 북남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우리 입장은 확고부동하다”고 재차 강조

다. 경제 관련

● 라선시 개방특구 가능성 관측(1/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북한 최초의 경제자유무역지대인 라선시를 ‘특별시’로 지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정령은 “라선시를 특별시로 한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힘
- 그러나 라선시를 특별시로 지정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올해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은 “대외시장을 확대하고 대외무역 활동을 적극 벌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외무역 활동을 강조하기도 했음.
- 앞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달 1991년 12월 라선시를 경제자유무역지대로 지정한 이래 처음으로 이곳을 방문하고 라선대흥무역회사 등을 현지지도
-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라선대흥무역회사의 수산물종합가공장, 축양장, 술가공장 등을 둘러보고 수출품 생산 및 수출실태를 파악한 뒤 “대외활동을 진공적으로 벌여 대외시장을 끊임없이 넓혀가야 한



다”고 강조

● **北, 개성공단 상품 주민공급 예정(1/5, 좋은벗들)**

-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상품을 주민들에게 공급할 예정이라고 대북 인권단체 ‘좋은벗들’이 주장
- 좋은벗들은 소식지에서 “북한 중앙당(노동당)이 올해 1~3월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한국 상품을 국영상점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급할 예정”이라면서 “주민 수요에 맞춰 국가 부담으로 국영상점을 통해 상품을 공급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전함.
- 그러나 좋은벗들은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상품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북한이 개성공단 물건을 구입하려 한다는 보고를 받은 바 없다”며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

● **北, 주요 도매시장 잇달아 폐쇄(1/6, 좋은벗들)**

- 북한 당국이 지방의 대규모 도매시장을 잇달아 폐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대북 인권단체 ‘좋은벗들’이 주장
- 좋은벗들은 소식지에서 “북한 당국이 작년 12월30일 내각 조치로, 올해 3월 말부터 청진 수남 시장의 운영 관리를 중지해 사실상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 지난해 폐쇄된 것으로 알려진 평안남도 평성시장과 더불어 북한의 대표적 도매시장인 수남 시장은 건설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함경북도 도당이 청진 수남구역 추목동과 청남동 사이에 조성돼 있는 시장을 허물고 현대적 감각의 공원과 살림집을 지을 계획이라고 전함.
- 좋은벗들은 “청진시 주민의 40% 이상이 수남 시장에 매달려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장이 폐쇄되면 그 여파가 상당할 것”이라면서 “수남 시장에서 장사하며 살아가는 세대들은 벌써부터 어떻게 벌어먹고 살지 걱정하고 있다”고 말함.
- 이 단체는 또 “추평 시장은 주민들의 왕래가 많고 복잡해 사기, 강도 등 범죄도 많이 발생하는 곳”이라며 “올해 1분기 폐쇄 준비에 들어가 청진시 수남 시장이 완전히 없어진 뒤 2분기에 폐쇄될 예정”이라고 덧붙임.

● **개성공단 최초 호텔 ‘한누리’ 3월 개장(1/7, 연합뉴스)**

- 북한 개성공단 지구내 최초의 호텔인 ‘한누리호텔’이 이르면 오는 3월 중 개장
- 한누리호텔 관계자는 7일 “남북관계 상황을 봐서 늦어도 봄 중에는 문을 열되 잠정적으로 개장 일자를 3월 중으로 잡아 놓고 있다”고 말함.
- 개성공단 남단에 2008년 2월 착공한 한누리호텔은 지상 5층 건물에



101실 규모이며 지난해 6월 완공됐지만, 남북관계가 좋지 않아 그동안 문을 열지 못했음.

- 총 투자비 126억 원에 최대주주인 LH(63%)를 비롯해 현대아산 등 모두 4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세운 이 호텔은 앞으로 기업 임원, 바이어 등 공단 체류자들의 숙박 불편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예상됨.

● 北신문, '희천속도' 강조..주민동원 강화 시사(1/6,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이 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올해 첫 공개 활동으로 자강도의 희천발전소 건설장을 시찰한 데 대해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로 대고조의 진군 속도를 최대로 높여 당 창건 65돌을 맞는 올해를 인민의 행복이 꽃피어나는 번영의 해로 되게 하려는 장군님(김정일)의 신념과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밝힌 것으로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희천발전소 건설장에서 군인들이 창조했다는 ‘희천속도’는 “선군천리마를 타고 강성대국으로 비약해 나가는 오늘의 대고조 시대를 추동하는 위대한 사회주의 건설속도”라고 주장
- “오늘 희천의 투쟁기풍은 우리 인민의 투쟁과 생활의 본보기로 되고 있다”며 “현실은 ‘희천속도’로 전진해나갈 때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고 경제강국 건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대비약, 대책신이 일어난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 올해도 주민동원 ‘속도전’을 강화해나갈 것임을 시사

● 필리핀서 침몰한 北선박서 마약 발견(1/7, 미국의 소리(VOA))

- 지난 1일 필리핀 해상에서 침몰한 북한 화물선 남양호에서 대마초와 메탐페타민 등 마약이 발견됐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7일 필리핀 언론을 인용해 보도
- 그러나 남양호 선원들은 이것이 차와 밀가루이며 불법 화물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VOA는 덧붙였다.
- 남양호는 작년 12월31일 자철석을 싣고 필리핀 카가얀주 아파리항을 출항한 지 수 시간 만에 침몰했지만 북한 선원 22명은 구명보트를 타고 탈출했음.

● 北, 화폐 개혁 후 ‘돈 잔치’(1/10, 연합뉴스)

- 북한이 화폐 개혁 단행 이후 농민과 광부들에게 거액을 지급하고 장교들의 급여를 인상하는 등 대대적인 ‘돈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짐.
- 10일 단동의 한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지난달 중순 농민과 탄광 광부들에게 1인당 신권 1만5천원씩 지급했으며 소위 이상 인민군 장교들의 급여를 100%가량 인상
- “이번 조치로 저소득층이었던 농민과 탄광 광부들의 자금 사정이 좋아졌고 2천-3천 원이었던 인민군 장교들의 월급은 4천-5천 원으로



인상됐다”고 전함.

라. 사회·문화 관련

● WHO, 北에 신종플루 백신 47만 5천 명분 제공(1/7, 자유아시아방송(RFA))

-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달 중 북한에 신종플루 백신 47만 5천 명분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전함.
- WHO 동남아시아 사무소의 칸칭 림파카나나랏 박사는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달 중 북한에 미국, 프랑스, 호주 등 선진 9개국으로부터 기부 받은 백신 47만 5천 명분을 처음 지원한다”며 “북한 인구의 2%에 해당하는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먼저 접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 그는 또 “약속대로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백신이 잘 접종되면 예정된 2차 백신이 지원될 것”이라며 “2차 지원 대상은 임산부, 5세 이하 어린이, 위험군 환자 등으로 북한 인구의 약 8%에 해당한다”고 설명함.
- 그는 이어 “WHO 평양사무소가 직접 배분 과정을 감시하진 않지만 북한 보건성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약속된 수혜 그룹에 백신이 제공되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임.

● 北, 축구·바둑 우수선수 선정(1/7, 조선신보; 조선중앙통신)

- 북한 체육지도위원회가 2009년 축구 종목의 우수선수로 남녀 각 11명을 선정했다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7일 전함.
- 신문에 따르면 최우수 선수로 뽑힌 골키퍼 리명국(평양체육단) 등 남자 선수 11명은 다 북한 내에서 뛰고 있고, 44년 만에 처음 월드컵 본선 출전권을 따낸 공로가 인정됐음.
- 여자 우수선수 11명은 북한 내 선수권대회에서 크게 활약했고, 이중 김영애(4.25체육단)가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다고 신문은 덧붙임.
- 또한 조선중앙통신은 2009년 최우수 바둑 선수로 리광혁, 최우수 감독으로 리봉일이 각각 선정됐다고 전함.

● 북한에는 눈 안 왔나?··‘폭설’ 언급 없어(1/7, 연합뉴스)

- 서울과 수도권에 기상관측 사상 가장 많은 눈이 쏟아진 지난 4일을 전후해 북한 지역에도 많은 눈이 내린 것으로 나타남.
- 7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공개한 인공위성 사진(촬영시점 4일)에는 남한의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물론 북한의 평안남·북도와 황해남·북도도 많은 눈이 내린 듯 온통 흰색으로 뒤덮여 있었음.
- 또 북한의 조선중앙TV가 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시찰한 것으로 사진과 함께 보도한 ‘근위서울 류경수제105땅크(탱크)사단’의 기동



훈련장도 새하얀 눈발이었음

- 그러나 남한에 ‘기록적 폭설’이 쏟아진 4일 오전 조선중앙방송(라디오)은 ‘전날 밤 해주에 눈이 약간 내렸다’고만 했고, 5일에도 ‘전날 밤 신의주와 평양, 사리원에 눈이 약간 내렸다’고 간단히 언급함.

● 北 월드컵 8강 신화 주역들 ‘정신력’ 강조(1/7, 조선신보)

- 북한 축구팀이 44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것을 계기로 북한 전역에서 축구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며 1966년 잉글랜드대회 8강 신화 주인공들의 와이드 인터뷰 기사를 실었음.
- 올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에서 북한 축구팀이 ‘죽음의 조’라는 G조(브라질, 포르투갈, 코트디부아르)에 속한 것을 오히려 ‘환영’한다면 북한 특유의 ‘정신력’에 의한 16강 진출에 기대감을 나타냄.

● 北, 신종플루 치료제 태부족(1/8, 좋은벗들)

- 남한이 타미플루 등 신종플루 치료제 50만명 분을 지원했음에도 북한에서는 치료약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알려짐.
- 대북인권단체 ‘좋은벗들’은 8일 소식지에서 ‘평양의 의료일꾼’ 말을 인용해 “평양에서 신종플루가 계속 퍼져 남한으로부터 지원받은 치료제를 평양의 발병 지역에 우선 공급하고 있다”면서 “지방까지 돌아갈 만큼 의약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하고 지방에 내려간 의약품도 도당 간부 등에게 먼저 가 주민들은 아직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전함.
- “화폐교환 이후 중국과 무역이 전면 중지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신종플루가 창궐한 신의주 등의 지역병원에서는 포도당, 식염수 등을 한 방울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임.
- 또 북한의 도당 교육부가 신종플루로 조기 방학에 들어갔던 각 급 학교의 개학일정을 조정하고 있는데 “평안북도 관내 대학교와 전문학교는 오는 8일 학생들을 불러들인 뒤 9일부터 수업을 시작할 예정이고, 중학교와 소학교는 27일께 개학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종플루가 잠잠해지지 않으면 개학 일정을 다시 조정한다고 한다”고 전함.

2. 대외정세

가. 6자회담 관련

● 北 6자회담 복귀 가시권 진입했나(1/8, 연합뉴스)

-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7일 북한이 지난달 평양에서 열린 북·미 양자대화에서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잠재적 의향(potential disposition)’을 암시했다고 밝힘.
- 이런 그의 언급은 전날 요미우리(讀賣)신문에 “6자회담 재개가 머지



않았다”는 발언이 실린 뒤에 나온 것으로 6자회담 재개의 기대치를 높여줌.

- 캠벨 차관보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성 김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의 12월 평양 방문에 대해 “매우 좋았다(very good)”라고 평가하면서, “가장 적절한 다음 외교수순은 6자회담”이라고 말함.
- 다만 그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해, 6자회담 재개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음을 시사

나. 북·미 관계

● 北김책공대 총장, 1월 말 방미 예정(1/6,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최고의 이공계 대학인 김책공업종합대학 홍서현 총장이 이달 말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전함.
- 코리아소사이어티의 에번스 리비어 회장은 RFA와 인터뷰에서 “현재 김책공대 홍 총장 일행의 미국 비자 발급 문제가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미국 방문이 실현되면 이 들은 뉴욕 주의 시러큐스 대학에 주로 머물 예정이며 코리아소사이어티가 뉴욕에서 이들 과 특별한 행사를 할 계획은 없다”고 밝힘.
- 그는 이어 뉴욕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2008년 평양 공연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추진돼 온 북한 조선국립교향악단의 미국 공연과 관련, “북한 측은 조선국립교향악단의 미국 공연을 원하고 있고 북한과의 이러한 교류가 미북 관계 진전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아직 특별한 진전 사항은 없다”고 말함.
- 미국 시러큐스대학은 2001년부터 정보기술(IT) 부문을 중심으로 김책공대와 교류해 왔 으며, 두 대학 학자들은 수차례 상호 방문을 통해 공동 연구 사업을 진행했음.

● 美 “김정일 방중 관련 정보 없어”(1/8, 연합뉴스)

-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과 관련한 정보가 없느냐’는 질문에 “김정일의 중국 방문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밝힘.
- 앞서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5일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가능성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크롤리 차관보는 또 지난해 말 북·중 국경을 무단 월경,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 국적의 대북인권운동가 로버트 박 문제와 관련한 진전된 소식도 없다고 말함.
- 그는 ‘로버트 박 억류 사건을 지난해 3월 북한 당국에 억류됐던 미국 국적 여기자 사건 과 다른 것으로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부인하면서 “첫 조치는 (로버트 박에 대한) 영사적 접근(면담)을 하는 것인데, 아직 우리의 이익 보호국(protecting power·스웨덴)을 통한 영사적 접근을 이루지 못



했다”고 현 상황을 전함.

● **미국무부 “킹 인권특사 방북계획 없다”(1/9, 연합뉴스)**

- 필립 크롤리 미국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8일 로버트 킹 대북인권특사가 내주로 예정된 방한을 전후해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그런 계획은 없다”고 밝힘.
- 북핵 6자회담 재개시 킹 특사가 회담에 참석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의 역할은 6자회담 프로세스와는 다르다”며 가능성을 일축
- “킹 특사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및 성 김 6자회담 수석대표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들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갖고 있다”면서도 “킹 특사의 역할은 (두 사람과) 다르다”고 일정한 선을 그음.
- 전날 국무부는 킹 특사가 11~14일 한국에 이어 15일 일본을 방문,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

다. 북·중 관계

● **中 단둥 특별경제..김정일 방중 임박 주목(1/7, 요미우리신문)**

- 중국이 6일부터 북한과 접경 지역에 있는 중국 단둥(丹東)역과 주변 지역에서 특별경제태세에 돌입했다고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이 7일 단둥발로 보도
- 소식통에 따르면 특별 경계는 6일 0시부터 시작, 일반 경찰과 무장경찰 등을 중심으로 시내 경비 강화 및 단둥에서 선양까지 연결하는 철도 노선에 주변에 있는 수상한 물건의 철거 작업 등이 진행되고 있음.
- 김 위원장은 2006년 방중 당시 전용열차를 타고 단둥을 통해서 입국했으며 당시에는 이번과 같은 경비 강화 조치가 방중 사흘 전계부터 시작됐던 것으로 알려짐.

● **中 “김정일 방중설 들은 바 없다”(1/7,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가 7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 임박설을 우회적으로 재차 부인
- 장위(姜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이 임박했다는 언론 보도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는 요구에 “현재까지 그런 방면의 정보를 들은 바 없다”고 말함.

● **中정부·伊운송사 北 밀수무기 검사안해(1/10, 요미우리신문)**

- 중국 정부와 이탈리아 운송회사가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를 전후해 북한의 밀수 무기에 대한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뉴욕발로 10일 보도
-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소속된 관계국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작년 여름 이란으로 밀수하려다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압수된 무



기와 관련해 이렇게 전함.

- 이 신문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 1874호를 채택했을 때를 전후해 북한의 밀수무기가 이탈리아 해운회사 OTIM과 계약한 프랑스 해운회사의 자회사인 파나마 선적 컨테이션 'ANL-오스트레일리아'를 통해 중국 상하이로 경유하고 있었으나 검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
- 이에 대해 관련 해운회사들은 “석유굴삭기로만 알고 있었지 무기가 선적된 것은 몰랐다”고 해명

라. 기타외교 관계

● EU, 北 장성택·김영춘 등 제재대상 지정(1/10, 연합뉴스)

- 유럽연합(EU)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매제이자 실세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과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등을 제재대상 인물로 지정하는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보다 강력한 제재를 단행했음.
- 10일 EU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EU는 지난달 22일 브뤼셀에서 열린 환경장관회의(환경이사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대(對)북한 제재 '규정(Regulation)' 개정안을 승인
- 규정은 회원국 정부, 개인, 법인을 망라해 EU 전체에 직접 적용되는 가장 강력한 규범으로 국내법적 편입절차 없이 각 회원국 실정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지님.
- 대북 제재 규정 개정은 작년 7월 열린 EU 외무장관회의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와와는 별개로 EU 자체 대북 제재에 나선다는 '공동입장'을 채택한 후속 조치임.
- 개정된 규정에는 ▲입국·통과 금지 ▲자산 동결 ▲역내 송금 금지 등의 제재를 받을 대상으로 기존의 개인 5명, 법인 8개 이외에 13명의 개인과 법인 4개가 추가됐는데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측근이자 실세들이 포함된 점이 주목됨.
- 추가된 13명의 개인 가운데는 장성택 행정부장과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이외에 김 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김동운 노동당 중앙위원회 '39호 실장', 전병호 노동당 군수비서 등이 주목됨.
- 또 영변원자력연구소, 련광무역회사 등 4개 법인이 대량파괴무기(WMD) 등에 연관된 혐의로 제재대상 법인으로 추가 지정
- 일각에서는 EU가 연말연시 휴가철에 접어든 12월22일에, 그것도 외무장관회의가 아닌 환경장관회의에 규정 개정안을 끼워 넣어 '조용히' 처리한 것은 제재의 강도와는 사뭇 다르게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소극적 행보를 했다고 해석

● '담배밀수' 北외교관 항소..보석도 기각(1/9, 미국의 소리(VOA))

- 담배 밀수 혐의로 스웨덴 법원에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러시아 주재 북한 외교관 부부가 항소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9일 보도

- 북한 외교관 박응식과 부인 강선희는 지난 7일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 스베아 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 지난달 16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형 확정 때까지 구금된 박씨 부부는 항소와 별도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항소법원은 8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
- 이들 부부는 작년 11월 러시아 담배 23만 개비를 자동차에 숨긴 채 스톡홀름에 들어갔다 밀수입 혐의로 당국에 체포
- 이들은 재판에서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했으나 스웨덴 1심 법원은 자국 주재 외교관이 아니므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VOA는 전함.

● **北고려항공 5년째 유럽취항 금지(1/9)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고려항공이 국제 안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2006년부터 5년째 유럽 노선에 취항이 금지됐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보도
- 유럽연합이 최근 발표한 취항금지 항공사 명단에 고려항공을 포함시킴에 따라 이 항공사는 올해도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에 취항할 수 없게 됨.
- 유럽연합위원회 교통에너지부 공보관은 RFA에 “고려항공이 안전성 향상을 위한 뚜렷한 조치나 노력을 보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유럽연합 안정성 검사 당국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취항금지 배경을 설명

3. 대남정세

● **30대 추정 한국남성 두만강 통해 월북(1/9, 연합뉴스)**

- 30~40대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 1명이 8일 중국 연변(延邊)자치주 투먼(圖們)시 인근 두만강을 통해 월북한 것으로 9일 알려짐.
- 중국의 대북소식통들은 “전날 낮 연지(延吉)국제공항에서 택시를 탄 한국인 남성이 투먼에서 훈춘(琿春) 쪽으로 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내린 뒤 강물이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 북한 쪽으로 넘어갔다”고 말함.
- 한국말씨를 쓰는 이 남성은 ‘충을 맞을 수도 있다’는 택시기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 땅을 밟았으며 북한 경비병 10여명은 이야기를 나눈 뒤 그를 데려갔다고 소식통들은 전함.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캠퐸 “北, 6자회담 복귀 의향 암시”(1/8)

- 커트 캠퐸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7일 북한이 지난달 평양에서 열린 북·미 양자회담에서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잠재적 의향 (potential disposition)’을 암시했다고 밝힘.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성사된 북·미 양자대화에서 북한 측이 6자회담 복귀의향을 시사했다는 비교적 구체적인 언급이 미 당국자를 통해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임. 캠퐸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D.C.의 외신기자클럽에서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호주, 뉴질랜드 순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보즈워스 대표, 성 김 (6자회담 수석대표)은 북한 회담자들과 6자회담 프로세스에 관해 얘기를 나눴고, 북한 회담자들은 그런 프로세스에 복귀하겠다는 잠재적 의향을 암시했다”고 말했다.
- 캠퐸 차관보는 “보즈워스 대표 등은 당시 ‘다음 순서는 6자회담을 여는 것이고, 문들(doors)은 열려있으나 그 문은 6자회담으로 이어지는 문이 유일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 측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어 캠퐸 차관보는 “우리는 (북·미 양자회담에 이은) 다음 외교적 순서로 6자회담을 열어야 하며, 6자회담이야말로 그 다음 외교수순의 가장 적합한 장(場)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6자회담이 재개되기 이전에 과연 북한과 또 다른 대화(제2차 북·미 대화)가 있을지와 같은 ‘전술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알려줄 게 없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음. 그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설과 관련, “그런 관측을 담은 보도가 있는 것을 나도 봤지만, 코멘트할 게 없다”고 답변을 피했음.

● 中, 北·美에 6자회담 재개 촉구(1/6)

- 중국은 미국과 북한이 6자 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함. 이달 유엔 안보리의 순회 의장국인 중국의 장예수이(張業遂) 유엔주재 대사는 5일 기자회견에서 작년 말 열린 북미 간 접촉은 긍정적인 발전이었다면서 이렇게 말함. 장 대사는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 당사국이 절충점을 찾아 6자회담이 가능한 한 빨리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북한은 대화재개의 필요성에 합의했지만, 북한은 6자 회담의 구체적인 재개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음.



- 그는 이어 이란 핵 프로그램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진행 중이고 성공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란에 대한 유엔의 새로운 제재 조치에는 반대한다고 밝힘. 그는 “외교적 노력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재의 적절한 시기나 순간이 아니다”라고 말함. 앞서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지난 4일 미국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겨냥한 제재 조치를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 <6자회담 재개, 北·美·中 엇갈린 계산>(1/5)

- 6자회담 재개를 둘러싸고 북·미·중 3국의 수 계산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음. 겉으로는 6자회담 조기재개 분위기를 띄우면서도 물밑으로는 서로에게 ‘공’을 떠넘기며 제각기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기 위한 수 싸움에 골몰하고 있음. 우선 북한은 6자회담의 ‘새판 짜기’에 전략적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분석임. 회담의 틀과 의제를 새롭게 짜 사실상 5대 1로 포위된 고립구도에서 탈피하고 논의를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려는 포석임. 북한이 1일 신년 공동사설에서 평화체제 논의를 핵심화두로 띄운 것은 이런 맥락임. 비핵화 논의의 ‘중속의제’로 치부돼온 평화체제 논의를 ‘주(主)의제’로 끌어올림으로써 협상의 틀을 완전히 바꾸려는 의도라는 분석임. 북한이 6자회담 복귀에 대한 ‘확답’을 미루는 것도 바로 미국으로부터 평화체제 의제화에 대한 양해를 끌어내려는 포석이라는 시각이 나옴. 평화체제와 함께 북·미 관계정상화도 북한이 미국에게 ‘답’을 듣기 바라는 의제임.
- 그러나 한편으로 북한은 중국이 계속 ‘든든한 원군’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음. 작년 하반기부터 북·중간 고위급 인사교류가 활발해진 가운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이런 맥락이라는 분석임. 북한이 중국 지도부가 강조해온 ‘대화과 협상’이라는 표현을 신년 공동사설에 원용한 점도 외교가가 유의하는 대목임. 미국은 6자회담의 조기 재가동에 일차적 목표를 두고 있는 분위기임. 이란 핵문제와 아프간 테러로 정치적 환경이 어수선한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북핵 문제에서 가시적 성과를 끌어올리려는 분위기가 읽혀짐. 특히 4월 핵안보정상회의와 5월 NPT(핵무기비확산조약) 평가회의를 앞두고 있는 점은 ‘핵 없는 세계’ 구축을 공약으로 내건 오바마 대통령에게 심리적 부담이 되고 있음.
- 이어 켈리 미 국무부 대변인이 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해) 말이 아닌 실천을 기대한다”고 강조한 것은 6자회담 재개의 성과를 조기에 거양하려는 미 행정부의 분위기를 보여준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임. 하지만 미국이 실제로 기대를 거는 쪽은 중국임. 6자회담 의장국이면서 북한에 대해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 대북 설득에 나서는데 가장 유용한 해법이라는 게 오바마 행정부의 인식으로 보여짐.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달 국무부 브리핑에서 “중국이 향후 몇 주간(few weeks) 이니셔티브 (6자회담 재



개에 대한) 조율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체제 논의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일단 한국과 궤를 같이함. 평화체제 논의가 비핵화 논의의 초점을 흐리지 않도록 비핵화 논의가 일정한 진전을 거둔 이후에 논의하는 쪽으로 한·미간 공감대가 구축되었다는 게 소식통들의 전언임. 그러나 상황에 따라 미국의 입장은 유동적으로 흐를 개연성이 적지 않음.

나. 미·북 관계

● 미국무부 “킹 인권특사 방북계획 없다”(1/9)

- 필립 크롤리 미국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8일 로버트 킹 대북인권특사가 내주로 예정된 방한을 전후해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그런 계획은 없다”고 밝힘. 크롤리 차관보는 이날 정레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핵 6자회담 재개 시 킹 특사가 회담에 참석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그의 역할은 6자회담 프로세스와는 다르다”며 가능성을 일축했음. 크롤리 차관보는 “킹 특사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및 성 김 6자회담 수석대표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들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갖고 있다”면서도 “킹 특사의 역할은 (두 사람과) 다르다”고 일정한 선을 그었음.
- 최근 워싱턴 조야에서는 진보적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북한의 인권문제가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전날 국무부는 킹 특사가 11~14일 한국에 이어 15일 일본을 방문,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美 “김정일 방중 관련 정보 없어”(1/8)

- 미국 국무부는 7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관련한 정보가 없다고 밝혔음.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의 방문과 관련한 정보가 없느냐’는 질문에 “김정일의 중국 방문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밝혔음. 크롤리 차관보는 이와 관련된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음. 앞서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5일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가능성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크롤리 차관보는 또 지난해 말 북·중 국경을 무단 월경,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 국적의 대북인권운동가 로버트 박 문제와 관련한 진전된 소식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로버트 박 억류 사건을 지난해 3월 북한 당국에 억류됐던 미국 국적 여기자 사건과 다른 것으로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음”고 부인하면서 “첫 조치는 (로버트 박에 대한) 영사적 접근(면담)을 하는 것인데, 아직 우리의 이익보호국(protecting power, 스웨덴)을 통한 영사적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 “미국방부, 北미군유해 발굴재개 논의 희망” <RFA>(1/5)

-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북한에 묻혀 있는 국군 유해 발굴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 국방부 관계자가 ‘올해 북한 내 미군유해 발굴 작업을 재개하기 위한 논의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5일 보도함. 미 국방부 ‘전쟁포로와 실종자 담당국’의 래리 그리어 공보실장은 RFA와 인터뷰에서 “중공군과 전투가 치열했던 함경남도 장진호와 평안북도 운산 등 한국전 격전지에 아직도 수천 구의 미군 유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이같이 말함. 그리어 실장은 “미군유해 발굴에 관한 논의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미군유해 발굴의 재개는 고위급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미국과 북한 간 관계가 좋아지고 미국 정부가 유해 발굴 팀의 안전을 확신할 수 있을 때 재개할 수 있다”고 덧붙임.
- 미국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33차례에 걸쳐 북한에 장비와 인원을 보내 미군 유해 공동 발굴작업을 벌여, 229구의 시신을 발굴하고 그중 72구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유해발굴 비용으로 북측에 2천800만 달러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2005년 5월 북핵문제로 북미관계가 악화하자 미국 측 작업인력의 안전 등을 이유로 작업을 중단했음.

● 불턴 “협상 통한 北, 이란 핵 포기 난망”(1/5)

- 미국의 대표적인 강경보수 인사 중 한명인 존 불턴 전 유엔대사는 4일 북한은 물론 이란도 협상을 통해 핵무기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음. 불턴 전 대사는 이날 워싱턴타임스에 기고한 ‘글로벌 위협’이라는 글에서 “북한과 이란은 지금까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내민 손을 뿌리친 채 시간을 벌면서 자신들의 핵과 탄도미사일(개발) 노력을 진전시켜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힘. 불턴 전 대사는 또 “북한과 이란은 미국과 다른 국가들로부터 가시적인 정치, 경제적 혜택을 뽑아내고 있다”면서 “따라서 현재 그들이 대화에 나서길 꺼리는 이유는 (미국과) 대좌하기도 전에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뜯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함.
- 그는 “북한과 이란이 핵능력을 유지하게 되면 추가적인 핵확산의 위험은 분명하고도 위협적인 것인데도, 오바마 대통령이 이처럼 계속 커져가고 있는 위험을 이해하고 있다는 신호는 없다”고 주장함. 그는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미사일방어 능력을 제거하면서까지 러시아와 과감한 핵무기 감축 협상을 벌이고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일방적인 전략무기의 감축이 러시아와 ‘불량 확산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해체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믿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생각은 순진하고 위험한 것”이라고 지적했음. 조지 부시 전임 행정부 시절 대표적인 강경파로 꼽혔던 불턴 전 대사는 그간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공개 비판해 왔음.



다. 중·북 관계

● “中정부·伊운송사 北 밀수무기 검사 안 해”(1/10)

- 중국 정부와 이탈리아 운송회사가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를 전후해 북한의 밀수 무기에 대한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뉴욕발로 10일 보도했음. 요미우리신문은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소속된 관계국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작년 여름 이란으로 밀수하려다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압수된 무기와 관련해 이렇게 전함. 이 신문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 1874호를 채택했을 때를 전후해 북한의 밀수무기가 이탈리아 해운회사 OTIM과 계약한 프랑스 해운회사의 자회사인 파나마 선적 컨테이션 ‘ANL-오스트레일리아’를 통해 중국 상하이로 경유하고 있었으나 검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
- 북한 무기를 실은 화물선이 상하이를 떠난 후 프랑스 정부가 ‘유엔 제재결의를 위반했을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고 결국 UAE 치안당국이 오만과의 국경 부근에서 화물선으로부터 밀수 무기를 압수했음. 북한은 작년 5월 이탈리아 해운회사 OTIM의 평양 대표에게 컨테이너 10개분의 ‘석유굴삭기’를 이란에 수출해달라고 의뢰했고, OTIM은 프랑스 해운사와 계약해 상하이를 경유해 이를 이란으로 수송하는 중이었음. 이에 대해 관련 해운회사들은 “석유굴삭기로만 알고 있었지 무기가 선적된 것은 몰랐다”고 해명했음.

● 中 “김정일 방중설 들은 바 없다”(1/7)

- 중국 외교부가 7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 임박설을 우회적으로 재차 부인했음. 장위(姜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이 임박했다는 언론 보도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는 요구에 “현재까지 그런 방면의 정보를 들은 바 없다”고 말했음.
- 장 대변인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일본과 한국 언론에서 중국 국경도시 단둥(丹東)에 특별 경계가 펼쳐지고 있거나 북한 선발대가 중국에 도착했다는 등 김 위원장의 방중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데 따른 공식 반응임. 장 대변인은 지난달 17일과 31일의 정례브리핑에서도 진위 확인 요청에 똑같은 같은 대답을 했음.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은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인 단둥(丹東)역과 그 주변에 6일부터 특별경계 태세가 갖춰졌다고 하며, 이는 김 위원장의 방북을 준비하는 막바지 작업의 하나라고 7일 관측했음.
- KBS도 6일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을 위한 선발대 30여명이 중국에 도착했으며 단둥에 치안병력이 대폭 증원됐고 평양과 선양(瀋陽)간 열차운행이 중단됐다”고 보도, 김 위원장이 조만간 방중에 나설 것이라고 점쳤음.
-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 선발대의 중국 도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



지만, 단둥역의 경계는 아직 평소와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며 완전히 통제됐다고 보도된 단둥 세관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최근 평양-선양 간 열차의 일시 중단은 전산 장애 때문에 벌어진 일로 알려졌으며 신의주-단둥 간 압록강 철교 통행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음.

● 中 “외국공관, 탈북자 보호 말아야”(1/5)

- 중국 정부가 주중 외국 공관이 탈북자를 수용하거나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힘. 장위(姜瑜)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언론이 최근 보도한 탈북자 관련 기사에 대한 진위를 확인해 달라는 요구에 “불법적으로 중국 국경에 들어온 북한인들은 중국의 법률을 위반했으므로 중국이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외국 공관이 이들을 수용하거나 감싸고 보호해서는 안 된다”고 말함. 중국 정부가 외국 공관이 탈북자를 보호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것은 최근 2~3년 사이에 처음 있는 일이어서 중국이 탈북자 인도 문제에서 강경 태도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장 대변인은 그러나 “우리는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의 원칙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한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함.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은 4일 중국 정부가 북한을 탈출해 중국 내 일본공관에서 보호받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출국허가를 작년 4월 이래 중단, 탈북자 10여명의 발이 묶여 있다고 보도함.
- 일각에서는 중국이 과거에 비해 강경한 톤이긴 하지만 탈북자에 대한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고 한 것을 두고 탈북자 문제가 언론에 부각되는 것을 꺼리는 중국이 일부 언론에 관련 기사가 나온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음.

● 中 “남북·북미 대화 지지”(1/5)

- 중국 정부는 5일 남북간 및 북미간의 대화와 협력을 지지한다고 밝힘. 장위(姜瑜)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신년공동사설에서 남한과 대화 의지를 밝힌 데 대한 중국의 논평을 요구받고 “남북간 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면서 환영의 뜻을 표명함. 장 대변인은 “중국은 남북한의 협력 강화를 시종일관 적극적으로 지지해 왔다”면서 “우리는 남북 양측의 화해와 협력 강화가 한반도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남북 양측의 공통된 이익에도 부합하며 지역의 평화,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다”고 말함. 장 대변인은 북한이 신년사설을 통해 미국과 대화 의지를 밝힌 데 대해서도 “우리는 북미간의 접촉과 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힘.
- 북한은 1일 신년 공동사설에서 “북남 관계 개선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며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했으며 대화를 통해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면서 북미 관계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함.



라. 일·북 관계

● 하토야마 “기회 무르익으면 방북”(1/4)

-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가 때가 무르익으면 북한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일본 현지언론이 4일 보도함. 하토야마 총리는 이날 미에(三重)현 이세(伊勢)시 이세신궁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 방문 가능성과 관련 “기회가 무르익어 정말 필요한 시기가 되면 북한을 방문하고 싶다”고 말함. 그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아직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밝혀 때가 무르익지 않았음을 시사함.
- 그는 “정부 쪽에서 아직 북한과 충분한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지 않음. 지금부터 접촉을 해야 한다”고 말해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북한과의 활발한 접촉설’을 부인했음. 하토야마 총리는 작년 12월 11일에도 기자들에게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방북 가능성과 관련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갈 필요가 있다면 당연히 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음.
- 하토야마 정부는 선거 공약으로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을 내걸고 총리를 본부장으로 관방장관과 외상, 납치문제 담당상 등 4명의 각료가 이끄는 납치문제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북·일 비밀접촉, 북측 제의로 성사돼”(1/3)

- 지난해 여름 이후 중국 베이징(北京)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진행된 일본 민주당과 북한간 비밀접촉은 북한의 제의로 성사된 것으로 3일 알려짐. 또 북한은 이 자리에서 과거에도 제의한 이른바 ‘적군파 추방’ 문제를 타진했을 가능성이 크며, 일본인 납치문제 등 현안에 대해 양측은 입장을 조율했으나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북수의 외교소식통은 전했다.
- 일본 측은 적군파 문제에 대해 ‘북한이 보호 중인 자국민 적군파 요원을 추방하면 국내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알려짐. 북한은 1970년 도쿄발 후쿠오카행 일본항공(JAL)의 요도호 납치에 관여했던 일본 적군파 요원 4명(북측은 3명만 인정)을 아직 보호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적군파 추방’ 방안은 북한이 적군파 요원들을 자국 영토 밖으로 내보내면 일본이 영사권 행사 차원에서 이들을 인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 한 소식통은 “북·일 접촉은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접촉이라기보다는 일본 민주당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아직 주요 현안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는 없다고 들었으며 북한의 진정성이 확인되면 일본 정부 또는 정치권에서 후속 접촉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음. 그는 “현재는 북한에서 만나자고 하니 일본 민주당 측에서 그 진의를 파악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과거 6자회담 내에 설치된 북



일 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 등에서 이른바 ‘일본인 납치사건’에 대한 재조사 등 추가 조치에 대한 논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당국자는 최근 북·일 접촉에 언급, “작년 여름 이후 미국과 한국 등에 대한 일련의 유화정책의 일환으로 본다”며 “일본인 납치 문제가 6자회담 재개 등 비핵화의 본질적 사안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 “北-日, 납치자 문제 수회 극비 접촉” (1/3)

- 일본 민주당과 북한 정부 관계자들이 작년 여름 이후 일본인 납치피해자 문제 협의를 위해 중국에서 수차례 접촉했다고 산케이신문이 3일 보도했음. 이 신문은 또 북한은 납치피해자 가운데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참의원 선거가 있는 올 여름 이전 공식협의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음.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민주당과 북한의 비밀접촉은 일본의 총선 이전인 작년 여름부터 시작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권 출범이후 본격화됐다고 전했음.
- 비밀접촉은 두 갈래로 진행됐으며, 하나는 민주당의 최고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간사장 측근이 거의 매월 1차례 꼴로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을 방문하는 형태로 이뤄짐. 다른 하나는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인 작년 10월 중순 별도의 당 관계자가 하토야마 총리 측의 지시로 중국을 방문해 북한의 고위 인사와 현안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임. 일련의 접촉을 통해 민주당 측은 북한에 일본인 납치피해자의 행방을 확인해 줄 것을 거듭 요구했음. 민주당 소식통에 따르면 비밀 접촉에는 북한 측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측근인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관여한 것으로 전해짐. 이와 관련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납치피해자) 생존 정보의 진위는 알 수 없지만 북한이 민주당 정권의 생각을 탐색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음.
- 하토야마 총리는 작년 12월 방북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면 가겠다”고 적극적인 방북 의사를 표명한 바 있음.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작년 10월 중국 방문 당시 원자바오 총리와 회담에서 ‘일본과 관계개선 용의가 있음’고 밝혔으며, 중국은 일본 측에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음. 북한은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내각 당시인 지난 2008년 8월 일본과 협의에서 납치자 문제 재조사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약속했으나, 직후 후쿠다 내각이 퇴진하면서 ‘재조사의 연기’를 통보했음.



마. 기타

● “北 2차 핵실험 정확한 위치 찾아” <美연구진>



- 북한이 작년 5월 감행한 2차 핵실험 장소가 미국 지질학자들에 의해 140m 범위까지 좁혀졌음. 지금까지는 미국지질조사국(USGS)이 내놓은 오차범위 7.6km의 위치정보가 가장 정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 지질학과 렌싱 원 교수팀은 미국 학술지 ‘지진학연구소식(Seismological Research Letters)’ 1-2월호에 실은 논문에서 2차 핵실험 위치를 북위 41°17′38.14″, 동경 129°4′54.21″라고 밝히고 위치를 표시한 위성사진도 공개했음.
- 북한의 1, 2차 핵실험 이후 세계의 많은 기관이 진원지 추적에 나섰다지만 초 단위까지 정확한 위도와 경도 수치를 제시하지는 못했음. 원 교수팀이 공개한 사진을 북한 지도와 대조해 보면, 북한의 2차 핵실험지는 함경북도 길주군 북쪽에 있는 해발 2천205m의 만담산 정상에서 남쪽 사면으로 조금 내려온 곳의 지하임. 연구진에 따르면 핵실험 위치는 여러 곳에 설치된 지진계를 통해 핵폭발로 인해 발생하는 지진파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짐. 그러나 땅속에서 지진파가 굴절, 반사하는 등 왜곡되며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상당한 오차가 있는 값을 얻을 수밖에 없었음.
- 원 교수팀은 땅속에서 지진파가 어떻게 왜곡되는가를 밝히는 대신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당시의 지진파와 2차 핵실험 당시의 지진파를 비교하는 ‘발상의 전환’으로 정확한 위치 정보를 산출할 수 있었다고 밝혔음. 차 핵실험 때 얻어진 ‘과학적 증거’(forensic evidence)를 활용해 땅속의 복잡한 변수를 제거함으로써 2차 핵실험 당시의 정확한 위치값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임. 이번 값을 얻기 위해 연구진은 일본 7곳, 한국 1곳, 중국 1곳 등 모두 9곳에서 측정한 1, 2차 핵실험 당시의 지진계 측정 자료를 활용했음.



● EU, 北 장성택·김영춘 등 제재대상 지정(1/10)

- 유럽연합(EU)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매제이자 실세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과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등을 제재대상 인물로 지정하는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보다 강력한 제재를 단행했음. 10일 EU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EU는 지난달 22일 브뤼셀에서 열린 환경장관회의(환경이사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대(對) 북한 제재 ‘규정(Regulation)’ 개정안을 승인했음. 규정은 회원국 정부, 개인, 법인을 망라해 EU 전체에 직접 적용되는 가장 강력한 규범으로 국내법적 편입절차 없이 각 회원국 실정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지님. 대북 제재 규정 개정은 작년 7월 열린 EU 외무장관회의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와와는 별개로 EU 자체 대북 제재에 나선다는 ‘공동입장’을 채택한 후속 조치임.
- 개정된 규정에는 ▲입국·통과 금지 ▲자산 동결 ▲역내 송금 금지 등의 제재를 받을 대상으로 기존의 개인 5명, 법인 8개 이외에 13명의 개인과 법인 4개가 추가됐는데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측근이자 실세들이 포함된 점이 주목됨. 추가된 13명의 개인 가운데는 장성택 행정부장과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이외에 김 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김동운 노동당 중앙위원회 ‘39호 실장’, 전병호 노동당 군수비서 등이 눈에 띈. 또 영변원자력연구소, 련광무역회사 등 4개 법인이 대량파괴무기(WMD) 등에 연관된 혐의로 제재대상 법인으로 추가 지정됐음.
- EU는 작년 6월18~19일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의장국 결론’에 “가장 최근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체) 발사 등 북한의 행위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나아가 국제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라고 비난, 5년 반 만에 처음으로 북한 핵 문제를 공식 언급했음. 그리고 7월 외무장관회의에서 “유엔 안보리 1874호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와 더불어 EU는 안보리 결의 범주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하기로”결정, 연말에 대북 제재 규정 개정을 마무리했음.
- 일각에서는 EU가 연말연시 휴가철에 접어든 12월22일에, 그것도 외무장관회의가 아닌 환경장관회의에 규정 개정안을 끼워 넣어 ‘조용히’ 처리한 것은 제재의 강도와는 사뭇 다르게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소극적 행보를 했다고 해석함.

● 유니세프 前대표 “北에 인도적 개입 확대해야”(1/10)

- 유니세프(UNICEF: 유엔아동기금)의 고팔란 발라고팔 북한 평양사무소 전 대표는 8일(현지 시간) “북한의 전반적인 식량난이나 영양 결핍, 물 부족 현상은 지속되고 있어 국제 사회의 인도주의적 개입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음. 발라고팔은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가 위치한 엔시나홀 3층 필리핀 콘퍼런스 룸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의 평양과 평양을 제외한 지역은 경제적



수준에서 격차가 크다”며 “평양 시민들은 보다 나은 복지를 누리고 있지만 다른 지역은 훨씬 열악한 상황에 있다”고 지적했음.

- 그는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유니세프 평양사무소 대표로 어린이 예방 접종과 의약품 및 생필품 공급, 위생 및 복지 체계 지원 등 구호 활동을 벌이며 평양 등지에서 3여년간 체류했음. 유니세프는 1997년부터 평양에 12명의 국제 요원과 24명의 북한 현지 보조 요원을 두고 활동하고 있음. 그는 북한 내 활동 과정에서 북한 정부와의 관계가 어떠했느냐는 질문에 “북한 정부의 일부 통제는 있지만 지역 단체나 기관과는 원활하게 협조가 이뤄져 구호 활동이 잘 진행됐다”며 “구호가 필요한 북한의 지역 곳곳에 가지 못한다면 현장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호 활동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음.
- 북한의 물 공급 체계나 위생 상태 등은 여전히 열악하고 전력 체계 등은 과거 소비에트 시절을 연상시키는 사례가 많으며 북한의 전체 가구 중 전기를 이용해 요리를 하거나 난방을 할 수 있는 가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발라고팔은 소개했음. 그는 “북한 전체 가구의 21% 가량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중 4% 가량이 중앙난방 시스템을 갖고 있다”며 “석탄이 도시에선 요리와 난방을 위한 주연료이지만 도시가 아닌 시골 지역 가구는 77% 가량이 나무를 태고 있다”고 말했음. 그는 북한의 2008년 인구 센서스 조사 자료를 인용, “북한 인구는 매년 평균 0.85% 가량 완만하게 늘어 1993년부터 2008년까지 16년 동안 300만명 가량 증가했다”며 “북한 정부의 통제 정책으로 인해 도시 인구는 거의 변함이 없으며 전체적으로 여성 인구가 51.3%로 남자보다 약간 더 많다”고 설명했다.
- 그는 반면 “북한 정부의 교육 우선 정책에 따라 10세 이상 인구의 문맹률은 거의 0%에 가깝고 무료 의무 교육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5-16세의 어린이나 청소년 중학교에 다니지 않는 사람의 비율도 거의 0% 가량”이라고 말했음.

● ‘담배밀수’ 北외교관 항소..보석도 기각(1/9)

- 담배 밀수 혐의로 스웨덴 법원에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러시아 주재 북한 외교관 부부가 항소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9일 보도했음. VOA에 따르면 북한 외교관 박응식과 부인 강선희는 지난 7일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 스베아 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음. 지난달 16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형 확정 때까지 구금된 박씨 부부는 항소와 별도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관을 받게 해 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항소법원은 8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음.
- 이들 부부는 작년 11월 러시아 담배 23만 개비를 자동차에 숨긴 채 스톡홀름에 들어갔다 밀수입 혐의로 당국에 체포됐음. 이들은 재판에서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했으나 스웨덴 1심 법원은 자국 주재 외교관이 아니므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고 VOA는 전했다.

● “北고려항공 5년째 유럽취항 금지”<RFA>(1/9)

- 북한 고려항공이 국제 안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2006년부터 5년째 유럽 노선에 취항이 금지됐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유럽연합이 최근 발표한 취항금지 항공사 명단에 고려항공을 포함시킴에 따라 이 항공사는 올해도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에 취항할 수 없게 됐다. 유럽연합위원회 교통에너지부 공보관은 RFA에 “고려항공이 안전성 향상을 위한 뚜렷한 조치나 노력을 보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유럽연합 안정성 검사 당국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취항금지 배경을 설명했다. 프랑스와 독일이 고려항공을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고려항공은 ‘경사로 검사’ 부분에서 심각한 안정성 결함을 드러냈고 ‘사고 대응’ 부분에서도 장치 결함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됐다고 RFA는 전했다. 고려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20여 대의 항공기 대부분은 1960~1970년 제작된 옛 소련 항공기로 알려졌다.

● 比언론 “침몰 북한 선원에 VIP 대접”(1/7)

- 필리핀 정부가 지난 1일 필리핀 해상에서 침몰한 북한 화물선 남양호 선원 22명에 대해 귀빈에 버금가는 특별대접을 해주고 있다고 필리핀 교회 및 시민단체 지도자들이 주장했다. 일간신문 필리핀 데일리 인콰이어는 지난 5일자에서 라자로 라모스 전(前) 카가얀주 의원의 말을 인용해 침몰돼 구조된 남양호 선원들이 관광객처럼 대접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 카가얀주 채광반대단체연합회 회원이면서 의사이기도 한 라모스는 이어 “북한 선원들은 검역을 위한 격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마을에서 배회하고 있으며 일부는 해변에서 수영을 하거나 술을 마시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 관리들은 엄격한 절차를 무시한 채 서둘러 북한 선원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다”면서 “선원들은 마치 VIP처럼 대접을 받고 있으며 보호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가톨릭 사제들도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역내 고위 공직자가 카가얀주의 채광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남양호에 선적된 자철석이 카가얀주의 강과 해변에서 채취한 것이 분명하다면서, 이 사건이 더 이상 불거지지 않도록 그 공직자가 일로코스 노르메주 이민국 관리에게 전화를 걸어 북한 선원들의 신병을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카가얀주로 넘겨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 필리핀 데일리 인콰이어는 또 남양호 선원들의 신병 처리를 놓고 일로코스 노르메주와 카가얀주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런 비난에 대해 정부 관리들은 조난당한 남양호 선원들에게 임시 피난처와 식량 공급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리들



은 남양호 선주측이 모든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 한편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7일 필리핀 언론을 인용해 필리핀 해안 경비대와 경찰, 세관, 이민국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남양호를 인양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마초와 메탐페타민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음. 그러나 남양호 선원들은 이것이 차와 밀가루이며 불법 화물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VOA는 덧붙였다. 남양호는 지난해 12월31일 자철석을 싣고 필리핀 카가얀주 아파리항을 출항한 지 수시간만에 침몰했지만 북한 선원 22명은 구명보트를 타고 탈출했음.

● “UNDP대북사업, 대체에너지 개발 역점”<RFA>(1/5)

- 2월부터 재개될 예정인 유엔개발계획(UNDP)의 대북 지원사업에서 태양력, 풍력 등 대체에너지 개발 부문에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5일 보도했음. 이 방송이 입수한 UNDP의 대북지원사업 ‘세부계획서’에 따르면 약 미화 250만 달러의 예산이 농촌 에너지 지원, 종자생산 개선, 수확량 조사 체계화, 수확 후 손실 축소, 풍력 에너지, 통계자료 수집의 6개 사업에 지원됨.
-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농촌 에너지 지원 사업에서는 수력, 태양력 등 대체에너지 시설의 설치와 기술 전수 및 교육이 이뤄지고, 북한의 에너지 전문가들을 중국, 인도, 필리핀, 유럽 등에 연수 보내는 프로그램도 운영됨.
- 풍력에너지 사업은 북한에서 바람의 성질과 대체 에너지로의 전환 가능성을 검사하는 것인데 “풍력에너지 장비가 북한에서 자체 제작될 수 있도록 시장을 형성하고 풍력에너지 전문가와 기술자를 양성하는 데도 힘을 계획”이라고 RFA는 전했다.
- 이 방송은 또 “UNDP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공동으로 종자생산 개선, 수확량 조사 체계화, 수확 후 손실 축소 등의 사업도 펼칠 계획”이라면서 “이는 낙후한 농업 시설과 후진적인 기술 등에서 기인하는 북한의 만성적 기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함. 방송은 이어 “UNDP의 이번 대북사업은 다른 유엔 기관보다 더 정밀한 감독과 감사를 거쳐 뉴욕 본부의 계획과 통제 아래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北, 2010년 사회불안 ‘매우 위험’”<EIU>(1/4)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악화와 내부 분열 등 사회불안 문제를 안고 있는 북한이 올해 세계 경제회복을 위협할 수 있는 아시아 지역의 ‘화약고(flashpoint)’중 하나라는 분석이 4일 제기됨.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니트(EIU)는 이날 보고서에서 아시아 지역이 전 세계적인 경기 회복을 이끌고 있지만 사회불안, 자산 거품, 디플레이션 압력 등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



- EIU는 ‘매우 위험’한 국가의 범주에 북한을 비롯해 중국·태국·인도네시아·필리핀·스리랑카·캄보디아·방글라데시 등을 분류함. EIU는 사회불안에서 촉발된 폭력 사태가 확대돼 정치적인 격변을 초래하고 이 때문에 경제활동이 제한될 때에 한해 시장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중국보다 한반도나 태국이 화약고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함. EIU는 북한을 예측할 수 없는 ‘와일드카드’라고 정의함. 북한 경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북한 정권이 6자회담 복귀를 통해 지원을 얻어내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은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봄. 지난해 단행된 화폐 개혁이 북한 주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고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불확실성 문제도 있어 정치적인 격변 위험이 상당하다고 설명. 북한 권부의 내부 분열 가능성도 제기. 내분이 주변국에 대한 공격이나 갑작스러운 통일로 이어져 엄청난 경제적 비용을 치르게 할 수 있다는 해묵은 논리도 제시함.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정치적인 격변이 일어난다면 한국 시장이 급락하겠지만 이 같은 리스크를 계량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진단함.

●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10일 방한(1/3)

- 비릿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인권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차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방한할 예정이라고 외교소식통들이 3일 전했다. 이번 방한은 최근 미국국적 인권운동가인 로버트 박씨가 자진 입북하고 로버트 킹 미국 대북인권특사가 11일 방한할 예정인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방한기간 탈북자 정착지원기관인 하나원을 방문, 북한 이탈주민들을 인터뷰하고 외교부, 통일부, 비정부기구(NGO) 관계자들과 면담할 예정이다. 그는 방한기간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 인권보고서를 작성,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는 북한을 직접 방문하는 방안도 추진해왔으나 북한이 내정간섭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와 관련,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달 9일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보편적 정례검토(UPR) 회의에서 북한 측에 문타폰 특별보고관의 조사와 접촉을 허용하라고 권고했으나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직은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검토와 보고를 목적으로 2004년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로 설치됨.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2005년, 2007년, 2008년 한국을 방문한 바 있으며 오는 6월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음. 한편 북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대북인권특사는 북한 관련국 순방차 11일 방한할 예정이며 조만간 북한 방문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펜타곤, 전략적 유연성 실습해야” <美전문가>(1/6)

-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아시아연구소(NBR)의 마이클 피네건 선임연구원은 5일 “펜타곤(미 국방부)은 아프가니스탄이 됐든 그 밖의 세계 다른 어느 지역이 됐든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뺏다가 넣는 전략성 유연성에 대한 ‘실습(exercise)’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함. 피네건 연구원은 이날 ‘한·미 공조확대’를 주제로 브루킹스연구소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주한미군의) 일부 전력이 빠진 뒤에는 다시 돌아올 것이고, 빠진 전력만큼 대체 전력이 생겨 결국 전략성 유연성 실행에 따른 대북한 억지, 방위능력은 약화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훈련을 통해 얻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힘.
- 국방부 한국과장을 역임한 피네건 연구원은 “적어도 대북 방위의 핵심부분인 주한미군 사령부 차원에서 한반도를 비우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지만, 그 예하의 보병대대, 공병중대, 폭발물해체반 등은 다른 지역에 배치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 그러나 그는 “전략적 유연성은 양날의 칼과도 같은 것”이라며 “세계 다른 지역의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주한 미군을 뺄 수 있지만, 반대로 다른 지역의 미군을 한국으로 투입할 수도 있는 문제”라면서 “한국에서는 이런 측면을 충분히 들여다보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밝힘. 또 그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한·미 공조 확대 문제와 관련,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공조를 확대하려면 현실적으로 한국 내 여론 문제 등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다”며 “한국 정부는 이런 공조확대가 ‘한·미동맹’ 때문이 아니라 한국의 ‘국가적 이익’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는 점을 한국민에게 강조해야만 한다”고 말함.
- 그는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에서 직면할 수도 있는 가장 어려운 작전은 아마도 북한 붕괴 이후의 상황과 관련된 것이 될 것”이라며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해외에서 (해당국의) 안정화 및 전후 복구 작업에 공동참여하는 것은 북한 붕괴 후 시나리오에서 한·미가 공조할 수 있는 기술과 절차적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함. 피터 벡 미 스탠퍼드대학 아시아·태평양센터 연구원은 과거 구소련과 동유럽에 적용됐던 ‘헬싱키 프로세스’처럼 북한의 안보문제와 더불어 인권문제를 병행 해결해 나가야 한다면서 북핵 6자회담 내에서 인권문제가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함.
- 벡 연구원은 이와 함께 한·미 대북인권담당 대사간 협의 정례화, 북한인권과 관련한 한·미·일 3자 협의체 신설, ‘탈북자 보호·정착 기구’ 창설, 한국 대북인권대사의 풀타임직 전환, 대북한 방송 강화, 북한인권 관련 한·미NGO(비정부기구) 협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힘.



-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 소장은 오는 11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금융위기 문제 이외에 기후변화 대처 문제 등 글로벌 이슈를 의제화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금융안정과 출구전략 등이 초점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의제를 너무 많이 설정할 경우에는 초점을 흐릴 위험이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힘.

● 백악관 인근에 ‘코리아센터’ 설립 추진(1/6)

-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인근의 조지메이슨대학에 (가칭)‘코리아센터’가 설립될 전망이다. 조지메이슨대 한국학연구소 노영찬 소장(종교학과장)은 6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대학 측은 한인사회가 2년 내 코리아센터를 건립할 계획이 있으면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뜻을 밝혔다”며 “코리아센터 외에도 베트남 등 소수계 센터 건립도 지원해 캠퍼스 내에 글로벌 커뮤니티를 만들겠다는 복안이 있다”고 말했다.
- 학부생 1만 5천명, 대학원생 9천명이 재학 중인 조지메이슨대에는 지난 2008년 한국학연구소가 개설됐음. 이 대학의 부지 무상 제공 계획에 따라 북버지니아와 워싱턴 지역 한인사회는 지난 1996년부터 추진되다 재원확보 벽에 가로막혀 지지부진했던 센터 건립에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임. 황원균 회장은 “부지가 해결됐기에 한인사회 부담이 적어지는 만큼 한인회도 모금 운동에 뛰어 들겠다”고 동포 언론매체에 밝혔고, 정세권 회장도 “이번 기회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센터를 건립했으면 한다”며 8만 달러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노소장은 “그러나 앞으로 2년 내 센터 건립을 확정 짓지 못하면 부지 무상 제공은 없던 일이 될 것”이라며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루빨리 한인사회가 모금 운동을 펼쳐 센터 건립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음.

나. 한·일 관계

● <‘안중근 유해’ 부각..日王 방한문제 ‘난기류’>(1/8)

-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환영한다고 밝힌 이래 지난해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되기까지 한 일왕의 방한 문제가 김 양 국가보훈처장의 8일 인터뷰로 다시 수면 위에 떠올랐음. 핵심변수는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기 한해 전인 1909년 일제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사살하고 식민지 전락 직전(1910년 3월26일) 사형당한 안중근 의사의 유해 문제임. 김 처장은 경술국치와 안 의사 순국 100년의 의미를 강조한 뒤 “안중근 의사 유해 문제가 해결되기 전 일왕이 방한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음. 그는 이어 “광복되면 조국에 묻어 달라”는 안 의사 유언을 지킬 수 있도록 유해 매장 관련기록과 사진 등을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과거사 문제에 대해 과거 자민당 정권에 비해 적극적인 일본의 민주당 정권 출범이후 비교적 ‘훈풍’이 부는 최근 한일관계에 비춰 일왕 방한이 연내에도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임. 특히 일본 정계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민주당 간사장은 지난달 한국을 찾아 “한국 국민이 환영해준다면 (일왕 방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음.
- 하지만 역사적 상징성이 큰 김 처장의 발언으로 일왕 방한 문제는 일단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어 보임. 한일강제병합 100년의 역사적 의미를 오늘에 되살리는 행사를 총괄 지휘하는 김 처장의 발언을 무시할 수 없는데다 안중근 의사 유해문제가 국내여론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임. 안중근 의사 유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과거사 문제와 관련된 전향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일왕의 방한을 추진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농후해진 셈임. 물론 일본 측이 안중근 의사 유해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중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등 상황이 변한다면 일왕의 방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靑 “한일 안보공동선언 검토 안 해”(1/8)

- 청와대는 8일 한국과 일본 정상간 ‘안전보장공동선언’이 검토되고 있다는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 대해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음.
-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본에서는 그런 선언을 필요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고 현재로서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음. 그는 또 “그런 선언을 할 필요성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현재 양국이 다른 방법으로도 잘 지내고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음.

● “韓日 정상, 안전보장 공동선언 검토”(1/8)

- 한국과 일본이 안전보장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상급의 ‘안전보장공동선언(가칭)’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음. 요미우리 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양국 정부가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두 나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안보면에서 구체적인 협력 강화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핵개발 문제를 안고 있는 북한에 대응하고, 국제 테러 대책 등에서의 연대강화가 기대되고 있다고 보도했음. 이 신문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1910년 한일 강제병합과 중군 위안부 문제 등 역사문제를 비롯해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마찰 등 미해결된 정치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음. 이 때문에 지금까지 인접국으로서 함께 북한의 핵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외무·방위 당국에 의한 안보면에서의 협력이 희박했다고 신문은 분석했음.



- 안전보장 분야에서 처음으로 검토되고 있는 안전보장공동선언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 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의 불안정 요인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국제 테러와 해적대책 등 지구 차원의 국제 공헌 활동에서의 협력 강화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예상했음. 신문은 양국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예상되는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 방문 때 (안전보장공동선언에 대한)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 “한국, 강제징용 1만 명 신원확인 추가요청”(1/7)

- 한국 정부가 일본에 강제 징용자 1만 명의 기록 확인을 추가로 요청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7일 서울발로 보도했음. 일본의 식민통치 당시 강제 징용·징병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한국의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피해자 진상규명위원회’는 다음주 중 일본 정부에 1만 명 정도의 신원 확인을 추가로 요청하기로 했음.
- 진상규명위원회는 작년 10월 일본 정부에 4만 명의 강제 징용 사실 조회를 요청한 결과 일본의 기업과 공장 등에서 일한 한국 민간인 4천727명의 후생 연금 기록을 확인했음. 이 위원회는 일본 정부로부터 현재 추가로 6천명의 연금 기록을 조회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이 위원회에는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모두 16만 명이 징용당했다고 신고했으나 약 90% 정도는 입증 자료가 없어 징용 사실 인정 작업이 지연돼 왔음.
- 한국 정부는 연금 기록이 확인된 4천727명이 일했던 직장명과 연금 가입 기간을 확인해줄 것을 일본 정부에 요청했음. 아사히신문은 이에 대해 “이는 한국 정부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지원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 정부에 연금탈퇴 수당 지급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 미·중 관계

● 中장성 “대만에 무기판매 美기업 제재해야”(1/7)

- 중국 인민해방군 장성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미국 기업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 이목을 끌고 있음. 중국 국방대학 전략연구소의 양이(楊毅) 해군 소장은 7일 반관영 중국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미국 기업과 이익 집단들이 무기 판매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훨씬 더 큰 손해를 중국에서 입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음. 양 소장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파는 것은 중·미 관계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미국 자신의 ‘핵심이익’을 해치는 자충수라고 지적했음. 그는 “양안(兩岸) 관계가 평화적으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파는 것은 어떤 구실도 찾기 어렵다”면서 “미국이 이를 고집한다면 중·미 관계의 장기적이고 건강한 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미국 스스로의 정치, 경제, 전



략적 이익도 해치는 자업자득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음.

- 양 소장은 “일부 인사들이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파는 것은 미국의 국가정책이며 달라이 라마를 만나는 것도 국내정치적인 필요에 따른 것이라면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쉽게 바꾸기 어렵다”고 전하면서 “전 세계의 어떤 것도 바꾸지 못할 것이 없으며 우리는 부단한 노력으로 미국이 정책적 선택과 새로운 규범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도 미국 측에 대(對)대만 무기 판매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달라이 라마와의 면담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하며 이미 미국에 엄중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면서 “미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의 위험성을 직시하고 중·미간 3개 공동성명을 준수해 무기 판매 계획을 취소하라”고 촉구했음.

● <中전문가가 본 올해 중국 외교 주안점>(1/4)

- 중국은 오는 5월1일 개막하는 상하이 엑스포를 계기로 대만, 티베트, 신장·위구르(新疆維吾爾)자치구 문제가 외교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예방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음. 추수룡(楚樹龍) 칭화(淸華)대 국제전략·발전연구소 부소장은 4일자 신경보(新京報)와 인터뷰에서 중국은 작년에 외교의 중심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에 뒀다고 평가하고 올해는 상하이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외교적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는 자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쾌속 성장하기 위한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특히 국내 문제가 외교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는 것임. 특히 대만문제와 티베트·신장에서 독립 요구 시위 등의 돌발 사건이 발생하면 이는 다른 국가들과의 외교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올해는 국내안정이 외교의 관건이라고 추 교수는 지적했음.
- 스인홍(時殷弘)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이 날짜 글로벌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미-중 외교관계가 미국의 대만 무기판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달라이라마 접견 계획 등으로 힘든 한해를 맞을 것으로 내다봤음. 스인홍 교수는 미·중간의 갈등과 마찰이 작년 한해 잠시 연기된 것뿐이지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미국이 대만무기 판매를 강행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를 만나면 중국은 강력 반발할 것이라고 전망했음. 중국의 반발로는 오는 4월로 예정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핵안보 정상회담 불참과 미·중 군사대화 중단 등이 거론됐음.
- 진찬룽(金燦榮)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작년은 미·중관계가 적극적이고 전면적으로 발전한 한해였다”고 회고하고 그러나 올해는 미·중간에 무역마찰과 위안화 절상 문제가 다시 불거져 갈등



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했음. 미국은 중국이 올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데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중국이 경제력 성장에 제동을 거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임.

● <대만무기·달라이라마..美-中관계 험로 예고>(1/3)

- 지난해 11월 중국에서 진행된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정점에 올랐던 중국과 미국 간 외교 관계가 올해는 벽두부터 험로를 예고하고 있음. 미국이 대만에 수십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판매하려는 데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도 만날 예정이기 때문임. 워싱턴포스트(WP)는 3일자 인터넷판 기사에서 미국과 중국이 올 초에는 긴장 관계를 연출할 것 같다고 보도했음.
- 우선 오바마 행정부가 수십억달러어치의 무기를 대만에 판매하는 방안을 올 초에 승인할 것으로 보임. 블랙호크 헬리콥터,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 등이 판매 목록에 올라 있으며, 디젤로 작동하는 잠수함, 신형 F-16 전투기 등을 팔 가능성도 있음. 중국은 대만을 자국 내 변절한 독립지역, 즉 자신의 영토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반군에 대한 군사 지원으로 인식함. 오바마 대통령은 또 티베트의 영적인 지도자 달라이 라마도 만날 계획임. 중국 정부에서 분파주의자로 분류되는 달라이 라마를 만나는 것 역시 중국 당국의 심기를 뒤틀리게 하는 행동임. 이 같은 논거를 들어 외교 전문가들은 올해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험악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음. 이란과 북한 이슈가 중대국면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 관계가 형성되게 됐다는 점은 눈여겨볼 부분임. 중국은 최근 서방국가들이 중심이 돼 이란을 강력히 비난하는 성명을 내는데 지지했지만 대이란 제재를 강화하는 데 대해선 반대함.
- 미국은 올해에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임.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은 북한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이는 데에서도 미국은 중국의 지지가 절실함. 미국 정부는 이 같은 문제로 인한 미중 관계 악화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면서도 일정부분 악영향을 예상하고 있음. 올 4월에 열릴 핵안보정상회의에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불참한다거나 중국이 얼마 전 재개된 군사부문에서의 대화를 중단하는 식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은 분석임. 아프가니스탄에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도 의문임. 미국 안보라인 고위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은 이견을 갖고 있지만, 경기 회복·비핵화·기후변화 등 주요 이슈에서 함께 일할 수 있음은 점을 이미 입증했다”고 말했음. 저우원중(周文重) 주미 중국대사는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와 달라이 라마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희망한다”고 논평했음.



라. 미·일 관계

● “미일 정상, 19일 동맹강화 공동성명”(1/10)

-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가 미일 안전보장조약 개정 50주년인 오는 19일 공동성명을 통해 미일 동맹의 강화를 표명할 것이라고 현지언론이 10일 보도했음. 일본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일 정상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일 동맹이 그동안 이룬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동맹관계를 더욱 심화하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을 것으로 예상됨. 공동성명은 또 반세기 전에 걸친 미일 동맹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기축이 되고 있다고 평가할 예정임.
- 오는 12일 하와이에서 열리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상의 회담에서도 미일 동맹 심화를 위한 협의가 진행됨. 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오키나와(沖繩)현의 후텐마(普天間) 미군비행장 이전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어 19일의 공동성명이 관계 복원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 “美 국무차관보, 日 오자와 방미 요청”(1/10)

- 미국 정부에서 일본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일본 정계의 최고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민주당 간사장의 미국 방문을 요청했다고 지지(時事)통신이 10일 보도했음. 지지통신에 따르면 캠벨 차관보는 8일(미국 현지시간) 자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교섭 상대는 일본 정부의 공식 대표이지만 오자와 간사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음. 캠벨 차관보는 이어 “앞으로 오자와 간사장의 이해와 지원을 강력히 원한다. 꼭 오자와 간사장이 미국을 방문했으면 좋겠다”면서 “그와 충실한 대화를 모색하는데 매우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의 고위 인사가 오자와 간사장의 위상을 언급하면서 방미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대등한 일미 관계’와 오키나와(沖繩)현의 후텐마(普天間) 미군비행장 이전 재협상, 아시아 중시 등은 오자와 간사장의 뜻이기도 함. 오자와 간사장은 특히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중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작년 12월 초에는 의원 140여명이 포함된 600여명의 대규모 방문단을 이끌고 중국을 찾았음. 캠벨 차관보의 오자와 간사장 방미 요청은 후텐마 기지 이전 등 미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계의 실세인 오자와 간사장과의 직접 대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임.



마. 중·일 관계

● 中, ‘日총리 난징방문 보도’ 부인(1/7)

- 중국 외교부가 7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의 난징(南京) 방문 타진을 보도한 일본 언론의 기사 내용을 부인했음.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이해하고 있기에는 그런 보도는 근거가 없다”고 잘라 말했음. 장 대변인은 “이미 192개 국가 50개 국제기구가 상하이 엑스포의 참가를 확정했다”면서 “엑스포 기간 외국 정상들은 관련 행사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해 하토야마 총리가 행사 기간에 난징 방문 일정을 잡기가 어려울 것임을 우회적으로 내비침.
- 앞서 일본 요미우리(讀賣) 신문은 중국이 일본과의 국민감정 개선을 위해 오는 6월께 하토야마 총리의 난징 방문을 타진해 왔다면서 중국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일본 히로시마(廣島) 방문을 동시에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전해 왔다고 보도한 바 있음.
- 하토야마 총리는 오는 6월께 상하이(上海) 엑스포 참석차 중국을 방문하는 계기에 난징을 방문할 것으로 신문은 관측했음. 난징은 일본군의 중국 침략 과정에서 1937년 대학살 만행이 발생한 도시여서 일제 침략과 과거사 측면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음.
- 장 대변인은 또 일본이 중국과 배타적경제수역(EEZ) 설정문제로 갈등을 빚는 태평양 상의 암초에 항만을 건설하기로 한 데 대해 불만을 표시했음. 그는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충즈냐오자오(沖之鳥礁, 일본명 오키노토리시마)는 일본의 EEZ 또는 대륙붕에 포함되지 않으며 인공시설을 설치한다고 해도 그 결과는 변치 않는다”면서 “일본이 이 암초를 근거로 관할 해역을 넓히려는 것은 국제해양법에 맞지 않으며 국제사회의 이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음. 일본 언론들은 최근 일본 정부가 올해 오키노토리시마에 항만을 건설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 자원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음. 일각에서는 중국 외교부가 최근 들어 일본 언론들의 보도에 과거와 달리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 장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일본 언론이 최근 보도한 탈북자 관련 기사에 대한 진위를 확인해 달라는 요구에 “외국 공관이 탈북자들을 수용하거나 감싸고 보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음. 일각에서는 중국이 과거에 비해 강경한 톤으로 탈북자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탈북자 문제가 언론에 부각되는 것을 꺼리는 중국이 일본 언론에 관련 기사가 나온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음.

바. 기타

● <한·중·일 외교장관 주말 ‘도쿄회동’ 주목>(1/10)

- 한·중·일 외교장관이 금주말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다자포럼을 계기로 연쇄 양자회동을 추진 중이어서 외교가가 촉각을 세우고 있음.



10일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무대신은 16일부터 이틀간 도쿄에서 열리는 제4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FEALAC)에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로 출범 10주년을 맞는 FEALAC은 동아시아와 중남미간 협력과 상호이해 증진을 목표로 동아시아 15개국과 중남미 18개국 등 33개국이 참여하는 정부간 대화협의체임. 동아시아 역내질서를 주도하는 4강(強)중 미국과 러시아가 참여하지 않고 한·중·일이 주축이 된 다자포럼이라는 점이 특징임.

- 포럼은 기후변화와 지속성장, 금융위기 등 G20(주요 20개국)에서 다루지는 글로벌 이슈들을 주요 의제로 논의하고 양 지역간 실질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주목할 점은 한·중·일 외교장관들이 이번 포럼을 계기로 제각기 양자회동을 추진하고 있는 점임. 3국 외교장관들이 연쇄 양자회동을 가질 경우 이는 지난 9월28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이후 3개월여만임. 특히 한·일 외교장관의 양자회동 가능성에 외교가의 시선이 쏠림. 작년 말 고등학교 교과서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둘러싼 독도 파동의 여진이 남아있는데다 일왕 방한문제 등 올해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양국 정부가 검토해야할 현안들이 적지 않기 때문임. 또 북핵 6자회담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일본 납치자 문제 등이 논의되고 지난 8일 일본 언론의 보도로 수면위에 오른 한·일 안보공동선언 추진이 거론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필리핀서 침몰한 北선박서 마약 발견”<VOA>(1/7)

- 지난 1일 필리핀 해상에서 침몰한 북한 화물선 남양호에서 마약이 발견됐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7일 필리핀 언론을 인용해 보도함. VOA는 필리핀 해안 경비대와 경찰, 세관, 이민국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남양호를 인양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마초와 메탐페타민을 발견했다고 전함. 그러나 남양호 선원들은 이것이 차와 밀가루이며 불법 화물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VOA는 덧붙임. 남양호는 작년 12월31일 자철석을 신고 필리핀 카가얀주 아파리항을 출항한 지 수시간만에 침몰했지만 북한 선원 22명은 구명보트를 타고 탈출했음.

● “中 단둥 특별경제..김정일 방중 임박 주목”(1/7)

- 중국이 6일부터 북한과 접경 지역에 있는 중국 단둥(丹東)역과 주변 지역에서 특별경제 태세에 돌입했다고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이 7일 단둥발로 보도함. 신문은 북중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조만간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 만큼 이번 경비 강화는 막바지 준비 작업으로 보인다고 분석. 소식통에 따르면 특별경제는 6일 0시부터 시작되었으며, 일반 경찰과 무장경찰 등을 중심으로 시내 경비 강화 및 단둥에서 선양까



지 연결하는 철도 노선에 주변에 있는 수상한 물건의 철거 작업 등이 진행되고 있음. 김 위원장은 2006년 방중 당시 전용열차를 타고 단둥을 통해서 입국했으며 당시에는 이번과 같은 경비 강화 조치가 방중 사흘 전까부터 시작되었음. 이 소식통은 “김 위원장의 방중이 임박, 중국 측이 테러 방지 등 경비를 강화하기 시작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함. 그러나 이번 경비 강화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북한이 지난해 11월 단행한 화폐개혁에 따른 경제혼란 때문에 중국 당국이 밀수나 탈북자 단속을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고 지적했음.

● <시한 넘긴 핵무기 감축 협상 지지부진>(1/7)

- 지구 상 핵무기의 대부분을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 간 핵무기 감축 협상이 지난해 타결 시한을 넘기고 나서도 여전히 지지부진함. 지난해 12월 5일 미-러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 후속 협정 마감에 임박할 때 만해도 연말연시엔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해가 바뀐 지금 협정 서명 시기에 대해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음. 7일 러시아와 미국 언론 그리고 군축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단 올해 첫 협상은 러시아 연휴가 끝나는 이달 중순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을 것으로 예상함. 양국 군축 협상 대표단이 지난해 8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 상당 부분 합의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 일부 기술적 문제만 해결되면 타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음.
- 그러나 미국의 미사일방어망(MD)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이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는 지난 연말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핵무기 감축 조약에 관한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계획에 대한 정보에 더 많이 접근하기를 원하고 있고 이 요구는 새 핵조약과 연계돼야 한다”고 말했음. 현재 급한 것은 러시아보다 미국 쪽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임.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체코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 구축’을 천명했음. ‘핵무기 없는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선 일단 오는 4월 워싱턴에서 개최 예정인 핵 안보정상회의와 5월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핵무기 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와야 함. 또 이에 앞서 지구상 핵무기 대부분을 보유한 미-러 간의 감축 협상이 타결돼야 함. 따라서 후속협정의 절대적 시한은 NPT 평가회의가 시작되는 5월이며 그때까지 후속협정이 타결되지 않으면 NPT 검토회의가 곤경에 처할 것이라는 지적임.
- 제임스 콜린스 전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는 6일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조만간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5월 평가회의 전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음. 또 일각에서는 협정 체결의 마지막 단계인 미국 의회 비준 과정에서 공화당 상원 의원들의 반대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도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백악관이 상원 비준을 받으려면 민주당 의원 외에 7명의 공화당 의원의 지지가 필요함. 미국의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닉슨센터의 폴 손더스 분석가는 “협상 가능성은 낙관하지만,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협상을 복잡하게 만들고 오바마 행정부가 제출한 협정안을 거부할 수도 있음”고 말했다.

- 한편, 양국은 지난 1991년 맺은 START-1 후속 협정을 위해 수개월째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지난해 12월5일 시한을 넘기고도 아직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 양국 정상은 지난해 7월 모스크바에서 만나 후속 협정이 발효되면 7년 안에 양국의 핵탄두를 1천 500~1천675개,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등의 발사 수단도 500~1천100개로 줄인다는 후속협정 초안 양해각서에 서명했음.

● 北, 태국 대사에 안성남 임명(1/7)

- 북한이 태국 대사에 안성남을 임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전했다. 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하면 태국 주재 조선혁명전권대사로 안성남이 임명됐다”고 밝혔으나 그의 약력 등은 언급하지 않았음. 안성남은 1996년 북한의 4자회담 대표단에 포함됐고, 1998년에는 외무성 북미국장으로서 북한의 ‘큰물피해 대책위원회’ 대표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했음. 전임 오영선 대사는 2005년 6월 위암으로 사망한 오성철 대사의 후임으로 2006년 부임했음.

● “北김책공대 총장, 이달말 방미 예정”<RFA>(1/6)

- 북한 최고의 이공계 대학인 김책공업종합대학의 홍서헌 총장이 이달 말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전함. 코리아소사이어티의 에번스 리비어 회장은 RFA와 인터뷰에서 “현재 김책공대 홍 총장 일행의 미국 비자 발급 문제가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미국 방문이 실현되면 이들은 뉴욕주의 시리큐스대학에 주로 머물 예정이며 코리아소사이어티가 뉴욕에서 이들과 특별한 행사를 할 계획은 없다”고 밝힘. 그는 이어 뉴욕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2008년 평양 공연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추진돼온 북한 조선국립교향악단의 미국 공연과 관련, “북한 측은 조선국립교향악단의 미국 공연을 원하고 있고 북한과의 이러한 교류가 미·북 관계 진전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아직 특별한 진전 사항은 없다”고 말함. 김책공대의 홍 총장은 작년 11월말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돌연 일정을 연기했음. 미국 시리큐스대학은 2001년부터 정보기술(IT) 부문을 중심으로 김책공대와 교류해왔으며, 두 대학 학자들은 수차례 상호 방문을 통해 공동 연구사업을 진행함.

● 中, 주일대사 외교부 부부장에 임명(1/4)

- 중국 정부가 4일 추이텐카이(崔天凱) 주일 중국대사를 외교부 부부장에 임명했음.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국무원이 추이텐카이 주일 대



사와 푸잉(傅瑩) 주영 대사, 자이권(翟雋) 외교부 부장조리를 외교부 부부장에 임명했다고 4일 보도했음. 통신은 이번 인사에 따라 우다웨이(武大偉), 허야페이(何亞非) 부부장이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덧붙였다. 우다웨이 부부장은 지난해 초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외사위원회 부주임으로 자리를 옮겨 앞으로도 공직을 계속 수행할 예정임. 그러나 통신은 북핵 6자회담의 수석대표 교체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음. 북핵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이자 의장을 맡고 있는 우다웨이가 외교부 부부장 자리에서 물러남에 따라 추이텐카이 신임 부부장이 자리를 승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외교 소식통들은 “추이 부부장이 6자회담 신임 의장직을 승계할 가능성이 크지만 우 부부장이 공직에서 은퇴한 것이 아닌 만큼 계속 의장직을 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음. 공석이 된 주일 대사 자리에는 청용화(程永華) 주한 중국대사가 유력한 가운데 류홍차이(劉洪才)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 등 다른 인사들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청 대사가 주일 대사에 임명될 경우 양허우란(楊厚蘭) 한반도 및 북핵문제 전권대사가 신임 주한 대사로 유력한 것으로 전해짐. 한편 중국 국무원은 이번 인사에서 튀리밍(羅黎明)을 국가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에 임명하고 쑤이바오(孫毅彪)를 해관총서 부서장에, 왕중웨이(王仲偉)와 둥원후(董云虎)를 국무원 신문판공실 부주임에 각각 임명했음.

● <中전문가가 본 올해 중국 외교 주안점>(1/4)

- 중국은 오는 5월1일 개막하는 상하이 엑스포를 계기로 대만, 티베트, 신장·위구르(新疆維吾爾)자치구 문제가 외교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예방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음. 추수룡(楚樹龍) 칭화(淸華)대 국제전략·발전연구소 부소장은 4일자 신경보(新京報)와 인터뷰에서 중국은 작년에 외교의 중심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에 뒀다고 평가하고 올해는 상하이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외교적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는 자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쾌속 성장하기 위한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특히 국내 문제가 외교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는 것임. 특히 대만문제와 티베트·신장에서 독립 요구 시위 등의 돌발 사건이 발생하면 이는 다른 국가들과의 외교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올해는 국내안정이 외교의 관건이라고 추 교수는 지적했음.
- 스인홍(時殷弘)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이 날짜 글로벌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미-중 외교관계가 미국의 대만 무기판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달라이라마 접견 계획 등으로 힘든 한해를 맞을 것으로 내다봤음. 스인홍 교수는 미·중간의 갈등과 마찰이 작년 한해 잠시 연기된 것뿐이지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미국이 대만무기 판매를 강행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달라이라마를 만나



면 중국은 강력 반발할 것이라고 전망했음. 중국의 반발로는 오는 4월로 예정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핵안보 정상회담 불참과 미·중 군사대화 중단 등이 거론됐음.

- 진찬룽(金燦榮)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작년은 미·중관계가 적극적이고 전면적으로 발전한 한해였다”고 회고하고 그러나 올해는 미·중간에 무역마찰과 위안화 절상 문제가 다시 불거져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했음. 미국은 중국이 올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데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중국이 경제력 성장에 제동을 거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임.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